

가사노동의 정책요구 및 정책목표에 대한 연구*

The Proposal of "politicization of household labor"
: Policy Needs and Policy Purposes on Household Labor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시간강사 윤소영

Ewha Womans University, Consumer Studies & Human Development
Lecturer : Yoon, So Young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가사노동의 정책목표 |
| II. 가사노동의 정치화 | V. 결론 및 제언 |
| III. 가사노동의 정책요구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politicization of household labor" to the resolution of housework-related problems which are the products of household work and the women's status. The major discussions of this framework can be summarized as follow :

First, the policy problems of household labor is that the segregation of market labor and household labor, public and private sphere, and sex-role affects value of household labor and status of women. Second, policy proposals on household labor is related to specific existing policy(family policy, women's policy). Third, Policy purposes are family welfare and women welfare, a symmetry of family and work. Thus, policy needs takes concrete shape an policy indicator of evaluting and and policy indicator of supporting. Ultimately, it is direct to evaluate more exactly household labor, to improve women's status, and to evaluate the quality of family living.

* 본 논문은 윤소영의 박사학위논문 「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연구」(1998)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I. 서 론

현대 사회의 가사노동은 자연상태의 햇빛, 공기, 또는 물과 같이 취급된다. 공기나 물은 무한대로 공급되어 평소에는 그 가치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으나 그것들이 부족하거나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와같이 희소성이 없는 재화는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재'라 부르며, 이러한 자유재는 경제대상에서 제외된다(박홍립, 1991).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과정을 거치고, 산소가 많은 쾌적한 공기를 원하고 자외선이 차단된 상태의 햇빛에 노출되려고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이나 공기, 또는 빛에 대한 요구수준은 더 이상 무한대로 공급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 역시 인간 생활에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 가치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수행하는 것이며, 항상 생활을 유지시키는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내 남아있는 여성의 몫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가정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여성들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가정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정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우리의 요구 수준도 변하였다. 1996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7%(통계청 a, 1997)이며, 특히 여성근로자 가운데 기혼여성이 44.4%(노동부, 1997)라는 보고는 여성 역할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주부의 역할도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가구의 가사용품이나 가사서비스에 대한 시장대체도 증가하여 1996년 도시가구의 월평균 가구가사용품비는 6만 4천원으로 '95년에 비해 7.3% 증가하였으며, 도시가구의 외식비에 대한 지출비는 최근 10년간('87-'96) 4.6%에서 10.0%로 5.4% 포인트 증가하였다(통계청 b, 1997). 그러나 비경제 활동인구로 규정되는 가사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92.3%이며(통계청 a, 1997), 아직도 약 6,148천명의 성인여성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가사노동은 경제활동체계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내 노동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여성 지위에 관한 두가지 문제로 집약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인간의 삶의 재생산 및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필요노동(김혜경, 1985)이며, 인간 상호적 관계, 즉 가족관계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관계적 노동(송혜림·이기영, 1990)이고, 또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가족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가족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가정생산활동(Reid, 1934; Becker, 1965; Beutler & Owen, 1980; 문숙재, 1990)이다.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가사노동은 가정내의 가사잡일이나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활동과 관계적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노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은 더 이상 자유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대상이 되는 '경제재'에 속한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학자들은 가사노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를 나타냈다.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는 경제학적인 배경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초자료는 가정학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여성해방론의 관점에서 문제를 가시화한 것은 여성학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활동들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 생산성을 인식하자는 요구에 그치고 체계적이고 표면화된 작업이 뒤따르지 못했다. 즉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생산성 연구나 실제적인 가치평가의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개별 가정이나 개인의 노력을 강조¹⁾하거나 또는 현실성이 부족한 주장²⁾에서 그친

1)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공정한 노동분담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개별가정의 사회화 수준이나 부부 노동의 분담정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각 가정의 수준 차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있다.

다면 가사노동의 현실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 사이에 놓인 간격은 영원히 좁혀질 수 없을 것이다.

실제 가정일에 대한 적용 문제는 정책입안가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정치와 국가정책은 사회 또는 인간의 생활영역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 가정을 위한 준비나 대책수립을 위한 기본적 과제는 국가나 정부의 몫이 크다. 따라서 가정을 더이상 사적 영역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국가와 정치영역에 집중시켜야 한다(이영자 외, 1993).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가사노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정치체계내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의도를 일컬어 ‘가사노동의 정치화(p politicization of household labor)’ (헬가 마리아 헤르네스, 1989)라고 한다.

가사노동의 정치화 개념은, 비록 가사노동의 문제가 개별 가정의 차원에서 나타나지만 사회와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가사노동의 문제는 개별 가정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대 자본주의 시장구조내의 노동구조,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권력 관계의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정치화는 가사노동에 대한 생산성 인정을 전제로 하며, 가사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모두 포함한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주장, 주부의 임금 요구, 가사노동의 경제적인 가치 평가의 당위성 주장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고, 이를 정치체계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일컫는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그 생산성 인식 사이의 격차 문제와 여성의 가사노동전담 문제를 가사노동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사노동정책’을 제안한다. 즉 가사노동에 대해 ‘가정내 사적인 일’로의 인식을 확대하여 하나의 가사노동정책의 체계적 문제로 해결해 나가자는 의도이다. 이는 국민

의 의식이 변하는 것을 기다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정책에 의해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변화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제도의 변화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상호 지원적인 변화매체가 되어 발전을 촉진한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의식변화에 장애와 진통을 겪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쟁점 중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과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도이다.

II. 가사노동의 정치화

A. 가사노동 정치화의 개념

가사노동의 정치화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또는 개인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the private is political)’(드루스 달럽, 1989)라는 슬로건에서 나온다. 이 슬로건은 가족내 폭력과 강간, 여성의 봉사에 대한 남성의 착취 등을 공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면서 ‘사적자유(privacy)’의 신화에 도전할 때 인용된다. 즉 사적영역에 대한 공적인 개입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문제가 공적인 관심사로 등장한다는 것은 정책에서 다루는 모든 이슈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정치화는 정치적 문제(the political issue)로 인식되지 못했던 가사노동의 문제를 정치체계(the political system)내에 포함시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the political will)를 말한다. 이것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일부 보수적 정부가 복지국가의 책임 일부를 사적가정의 여성들에게 떠넘김으로써 국가의 예산절감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민간화(privatizing)’의 개념과 대별된다.

엄격히 말해 사적인 것은 가족만은 아니지만, 가

2)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방법론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표 1〉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복합성

사적영역	공적생활의 사적영역	공적영역
사적생산 가 정	조직체 문화적 생활 대중매체	국가기구 국가생산

출처 : Jürgen Habermas(1974). *Strukturwandel der Offentlichkeit*; 드루스 달립(1989).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p.100에서 재인용

족이나 가정은 사적영역을 대표하는 형태로 잘 알려져 왔다. 이와 같이 가족 또는 가정에 대한 이해를 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화론적인 해석 범주에 속한다. 인류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양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연스러운' 사회구성체로서 개념화하여, 가족은 사회가 요구하는 재생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단위(Rosaldo & Lamphere, 1974)로 인식하였다. 가족을 가정이라는 특정의 공간과 사랑이라는 특정한 애정의 유대로 묶여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하나의 도덕적 단위로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은 '비인정적' 규범에 의하여 지배되는 외부의 경제적, 정치적 세계와는 대립되는 '사적인' 실체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개념화 작업을 통해 가정내의 재생산 기능 및 이와 관련된 가사노동 활동은 양성간의 성별분업으로 인해 여성에게 부여되는 인류 보편의 문화적인 관념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개별 가정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가사노동의 특성을 사적노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가 자본주의의 노동분리를 통해 가정 내부와 외부의 공간상의 분리를 뚜렷이 하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성계충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이 사적노동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었지만, 가사노동의 공적 특성은 일부 여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 가사노동의 공적 생산화의 노력을 통해 인정된 바 있다. 벤스톤(Benston, 1978)은 지금 까지 가정에서 행해지던 일을 공적 생산으로 바꾸는

것, 즉 사회가 집안일과 양육의 사회화를 향해 변화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란 생산방식이 사적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으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가사노동의 사회적 생산화'(김혜경, 1985)라는 표현이 알맞다. 이것은 재생산노동으로의 가사노동 개념이 여성의 낮은 지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 국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동화, 집단화의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가사노동을 생산영역에서만 공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사회주의 국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의 공동화는 개별 여성은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여성은 가사노동 자체로 부터 해방시키지는 않았다(송혜림, 1993).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생산성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존의 여권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공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이후의 노동분리를 전제로 한 공적영역-사적영역이라는 이분적인 사고체계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결국, 가정이 수행했던 기능들이 가정밖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적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 본래 가정의 기능이었다는 점, 가사노동이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점, 가사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가정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모두 사적이라는 사고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문숙재 · 윤소영, 1996)의 근거는 가사노동이 공적인 특성을 가진 노동임을 증명하고 있다.

B. 가사노동 정책의 성격

공적영역은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이, 사적영역은 감성중심주의적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이분적 사고의 연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제안된다. 그 한 가지는 사적영역에 남성이 진입하고 공적영역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1960

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유주의 폐미니즘은 사적 영역에 남성이 진입하는 것을, 사회주의 폐미니즘은 공적영역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좀더 강조함으로써,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적영역에 남성이 진입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평등한 노동분담이라는 실천적인 과제를 놓았으며, 공적영역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은 시장노동에서의 남녀평등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참여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사적영역으로 여겨져 온 가사노동을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이다. 가사노동은 사적 특성 뿐 아니라 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앞서 제안된 방법은 가사노동보다는 시장노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까닭에 가사노동을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가치있다. 예를 들어 모든 가사노동을 사회로 이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남게되는 고유의 가사노동 영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현재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적지 않은 여성들의 노동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공적영역으로의 확대문제는 하나의 이슈가 되며, 이는 가사노동의 정치화 주장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가사노동의 문제가 정책요구로 수용될 수 있는 근거는 국가정책이 '사회전체를 위하여 가치의 권위있는 분배를 하기 위한 것'(김영모, 1983)이며, '관심 있는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취급하는 행위자가 행하는 목적지향적 행동과정'(박홍식, 1981)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어떤 사회문제나 요구가 개인의 책임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에도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과정 속에서 겪는 문제나 사건은 정책 요구로 구체화되며, 이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고, 정책 결과는 개개인의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사노동과 관련된 생산성 문제와 여성지위의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로 인식된 상태에서 이를 정책요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횡포일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정책의 성격은 가족정책에 근접한다. 가사노동이 가정이라는 공간과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통해 실행되며, 가정의 안정과 가정생활의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하나의 집합적 개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정책과 다르다. 가족정책의 분석단위는 가족구성원인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며,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룬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목표나 방향점은 오늘날의 가족이 위기인가, 아니면 변화인가의 논쟁을 통해 가족의 부양관계의 와해나 가정파괴 현상, 그리고 가족생활의 구조, 기능 및 가치의 상실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공세권, 1996). 이러한 점에서 가족정책은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결손예방은 물론 결손보호 등 다각적인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가족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목표는 가족의 복지이며, 이에 더하여 자유, 권리보장, 정의, 사회적 통합, 효율성, 평등성이 가족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Zimmerman, 1988). 특히 가족원간의 권리보장과 평등의 증진이라는 목표는 최근에 이르러 여성의 평등화 운동과 함께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가족정책의 평등화 운동은 여성정책의 그것과 같지 않다. 가족정책은 국가차원에서 가족의 존속과 복지문제를 우선적으로 하며 그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양성 간의 평등문제를 다루지만, 여성정책에서는 여성의 평등화 운동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성정책이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이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갖는 정책으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향상을 목적으로 여성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포괄적인 정책(국가안전기획부, 1997)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에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의 결속력을 강조하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제반 여성정책에서는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연결지어서 설명한다.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무급의 특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지향점을

〈표 2〉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비교

정책내용	가족정책	여성정책
정책목표	가족의 복지	여성의 발전
정책문제	가족생활의 구조, 기능, 가치 상실 문제	여성문제
가족에 대한 이해	소득결합단위(경제공동체)	가족구성원의 개체화
가정내 노동분담	성별역할분담	남녀 평등한 노동분담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관계	공존관계	가사노동의 시장노동화

남녀평등에 기초한 여성정책에서는 가사노동이나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인해 불평등한 구조에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여성의 권리신장이 곧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라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관련된 가족임금이나 주부임금,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노력은 오히려 주부인 여성의 지위를 낮게하고 가족내 성별분업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박언주, 1996)고 비판한다. 결국 여성정책에서 가사노동은 사적영역에 남성이 진입하는 문제와 공적 영역에 여성의 진입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여성정책이 여성의 공적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가사노동 정책은 가사노동의 공적영역 확대를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여성정책과는 달리 가사노동 정책이 요구되는 본질적 차이이다.

이와같이 두가지 정책에서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이 매우 다름으로써 실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부나 가사노동을 정책적으로 쟁점화시켜 려고 하는 입장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혼란스럽다. 따라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내용이 필요하다.

III. 가사노동의 정책요구

가사노동의 정책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후 발생한 노동분리, 공·사 영역분리, 성역할분리에 따른 가사노동의 가치인식 및 노동지위에 관련된 문제를 말한다. 즉 가사노동은 그 가치가 인정되지만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고,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지며, 사적 공간인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사적 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분리나 성별노동분담은 이분적 사고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결국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각 개인 또는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지위와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켰으며, 개인 행동이나 사회 규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으로는 가족임금, 가사노동의 사회화, 주부의 임금요구, 가치평가의 방법론 개발, 그리고 공정한 노동분담 등이 있다³⁾.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은 요구층족의 방법과 근거에 따라 〈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집단의 요구에 반응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 1차 집단, 시장기구, 민간복지단체, 그리고 행정서비스 등의 활동으로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은 요구 층족의 근거에

3)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자의 학위논문 II 장을 참조바람.

〈표 3〉 가사노동 문제 해결 방법

요구 충족 방식의 유형			가사노동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
충족 방법	충족 근거	충족 부문	
제 1차 집단	사적인 충족	비공식부문	가족원간 분담
시장 기구		영리 부문	영리적 사회화
민간복지단체	사회적인 충족	임의 부문	복지적 사회화
행정 서비스		공적 부문	가사노동의 공적 사회화

출처 : 平岡公一(1984), 社會變動と轉換期の社會福祉, 經濟社會學會編, 「環境と福祉の經濟社會學」, p.128; 고영복(1991), 「사회정책론」,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p.62에서 재인용한 표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따라 ‘사적’인 요구의 충족방식과 ‘사회적’인 요구의 충족방식으로 구분된다(고영복, 1991).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원간의 노동분담을 통해 충족되지만, 만일 개별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는 가정밖의 시장기구나 민간복지단체 및 행정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

이때 가족원간에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방법은 가사노동의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개별 가정의 자율성에 근거해서 충족시키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문제를 시장기구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적 사기업이 사적 소비수단으로 개별 가족에 공급하는 영리적 사회화 형태에 해당되며, 민간복지단체의 설비와 정보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복지적 사회화의 형태에 해당된다. 엄격히 말해서 복지적 사회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설비의 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정의 기능이 외부화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유아원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문숙재·윤소영, 1998).

그러나 개별 가정내에서 충족되지 않거나 가정밖의 시장기구나 다른 사회 서비스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가사노동의 문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때 가사노동의 문제를 공적 문제로 이슈화하여 행정서비스를 통해 충족시키는 방법이 ‘가사노동의 정치화’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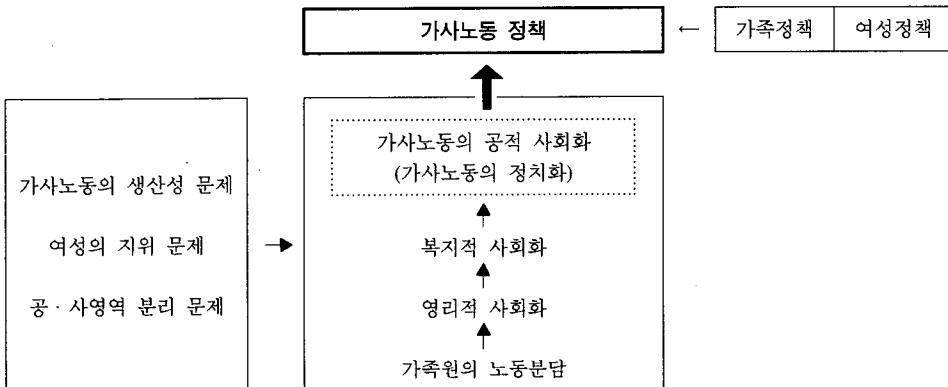
려는 일련의 과정이 곧 ‘가사노동의 정책 요구’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들어 개별 가정에서 가족원의 노동분담에 대한 실행과 원칙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와,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영리적 또는 복지적 사회화의 노력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가함으로써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한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요구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노동 분담의 실천과 영리적 사회화 및 복지적 사회화의 실현을 통해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러한 방법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가사노동의 정치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계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결국, 가사노동의 정책요구란 가사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궁극적인 대안으로 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의미하며, 이는 정책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이다.

또한 가사노동의 정치화 개념이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가정이라는 공간과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통해 실현되며, 가족의 형성과 해체 등 가정의 안정과 가정생활의 보장을 꾀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범위안에서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문제가 여성의 지위와 무급의 가사노동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의 원

칙을 실현하려는 여성정책의 범위안에서 설정될 수 있다(문숙재·윤소영, 1997). 그러나 가족정책은 가족원 전체의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며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원칙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우선한다고 볼 때 가사노동의 문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정책은 기존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틀과 기구의 범위안에서 설정되기는 하지만, 가사노동의 문제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긴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제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에 기초한 활동상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총노동력⁴⁾'의 개념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보수 가사노동을 경제적 생산과정에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성계정이 제안된다. 위성계정을 설치하여 가사노동 관련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총노동력 지표'를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총노동력 지표의 체계에서는 노동력조사의 범위확대와 함께 시간사용조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시간사용조사는 기존



〈그림 1〉 가사노동 정책요구의 위계

IV. 가사노동의 정책목표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요구는 공적영역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행동지침과, 가정내에서 주부가 전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행동지침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은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고 관련된 정보를 체계화 시키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사노동 활동은 공식적인 국민계정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계정체계에 근거한 노동력구조는 가사노동을 비경

의 노동력조사에 비해 활동중심으로 전체인구의 활동상태를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생산성 까지 파악된다. 대규모로 수행되는 시간사용조사를 이용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활동분류를 세분하여 정확한 가사노동시간량과 활동영역이 조사되어야 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금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세분화되고 공식화된 시간사용조사가 요구된다.

가사노동의 생산성 평가는 반드시 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가사노동에 대한 법체계에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조정을 하는 과제

4) 노동력을 정의할 때, '총노동력'의 개념이란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정내 일차적 또는 비일차적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가공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정내 의·식·주생활, 가족관리, 가정경영 및 관리행동과 관련된 가사종사자도 포함한다.

〈표 4〉 가사노동 정책의 목표와 요구되는 규범들

가사노동 정책의 목표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규범
가사노동	생산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노동력 개념에 근거한 노동력집근법 도입 ◀ 현법 및 가사노동 관련 하위법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작업 ◀ 국가 정책 입안자들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치평가에 대한 행동지침	가치평가 방법의 객관적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가치 산정과 관련된 공식적 통계자료의 체계화 ◀ 위성계정 제안 ◀ 현행 법체계에 알맞는 가치평가방법 개발 ◀ 전공자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험업계나 법조계의 이해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가사노동 지원에 대한 행동지침	평등한 노동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균형과 조화 ◀ 남녀 평등 관련법 강화 ◀ 가족원의 가사노동 참여를 장려하는 시책 ◀ 부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 및 탁아 정책의 적극적 실행

는 가족법을 통해, 그리고 각 가족구성이 외부와의 접촉을 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과제는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나 가족법에서의 재산분할청구제도가 세법이나 국민연금법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법적 지위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노력들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의 가치산정을 위한 공식적 자료를 체계화하고, 이를 근거로 위성계정을 새롭게 구성하며, 이론적 가치평가방법론을 현행 법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작업이 해당된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론의 개발은 전문인 양성과정을 통해 용이해 질 수 있으며, 보험업계나 법조계의 이해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일반인들은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이해하는 일과 객관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가사노동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다.

한편, 여성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해결하려는 원칙

은 ‘공정성’을 기초로 한 평등한 노동분담을 지향한다. 평등한 노동분담은 남성과 여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이를 수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족내 남편과 아내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동분배를 통해 이를 수 있지만,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명시해야 한다. 즉 가족원 모두가 가사노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들과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육아 및 탁아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보다는 사회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방안을 채택하여 1972년 새로운 가족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 의하면 남성들도 그의 부인과 가사일을 분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Modlich, 1993).

일반적으로 노동분담에 관한 정책은 취업주부 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게 노동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는 친가족 기업 정책 등 세가지 기조위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기반은 기혼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한 보육정책이나 여성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져왔다. 즉 고용기회의 균등실현,

근로조건 개선, 유아보육시설의 확대를 정책목표로 한 남녀평등 고용정책으로 여겨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곧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생산활동을 지원해주며, 동시에 가족원간의 평등한 노동분담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때, 가사노동의 노동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

노동분담에 대한 정책은 취업주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전업주부 가정은 남편들이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아내가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결국 상당히 대등한 노동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신념(Ferree, 1983)에 근거한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시장노동시간을 대체하는 시간은 여가시간이고, 아내의 경우 시장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으로 대체된다는 시간 대체효과의 성차이(문숙재·김순미·정순희, 1994)는 남편이 시장노동을 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여성의 시장노동을 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은 평생 여성 혼자서 감당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전업주부 가정의 남편도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고 아내도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정책문제의 단위, 정책의 대상층,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시켜 볼 때, 가사노동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족의 안정과 여성복지의 증진, 그리고 가족과 일의 조화 등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과 직장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 전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소외된 여성의 삶을 복지적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생산성 문제와 여성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지향한다. 가사노동 정치화의 주장은 밀즈(Mills)의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발휘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흔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넘겨 버리는 많은 고충들이 사실은 그 사회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공적 문제일 가능성성이 높다. 따라서 공평한 사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회현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즉 '사적인 문제'는 곧 '공적인 관심사'이므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찮고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사적노동으로 한정되었던 가사노동도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공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개입, 즉 가사노동의 정치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사노동의 정치화 개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되며,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여성지위와의 관계를 정책에서 실현하는 과정을 가사노동정책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가사노동이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노동분담이며, 이는 가족의 복지만을 강조해서도 안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만을 주장해서도 안된다. 가족정책이 가족을 하나의 집합적 개념으로 보고 가족의 존속과 복지를 위해 사회적 의도적 행동을 하는 것이며, 남녀평등은 여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은 가사노동정책의 범위일수는 있지만 필요 충분의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은 이론적으로 가사노동정책의 행동지침의 범위를 설정하며, 정책실현과정에서는 기존의 행정력이나 정책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하나의 정책과정으로 설정될 때 각 단계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작업들은 정책목표와 일치되어야 한다. 이에 가사노동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단계별 문제점들과 이것이 정책목표에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요구 단계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가사노동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주부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일에 집중시킨다. 현재 가사노동에 대한 접근은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산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부의 지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에야 비로소 평등한 노동분담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다거나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주장이 여성을 가사노동 자체로 부터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책과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정책을 통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가사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는 가족원의 평등한 노동분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는 취업주부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게 노동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는 친가족적 기업정책 등의 3가지 기조위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일차적으로 취업주부가정에 시급히 요청되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노동분담에 대한 사고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 기초한다. 따라서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체 여성의 문제로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정책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기구와 가사노동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기금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사노동을 전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부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정당활동과 시민단체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는 정책결정자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도를 띠어야 한다. 특히 여성정책 및 가족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책기구인 중앙행정기구와 전국 시도단위의 부녀복지국과 부녀복지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고영복(1991). 「사회정책론」.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공세권(1996). 가정의 본질과 정책적 접근. 한국가정 관리학회 제 19차 학술대회 자료집, 3-18.
- 국가안전기획부(1997). 「21세기 국가발전과 여성의 역할」.
- 김영모(1983). 「현대사회 정책론」. 한국복지정책연구 소 출판부.
- 김정선(1992). 여성학에서의 재생산 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통계연감
- 문숙재(1990). 「가정생산(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서울:신광출판사.
- 문숙재·윤소영(1996). 가사노동의 사적특성과 공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199-210.
- _____. (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_____. (1998). 가사노동의 정책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I: 가사노동의 측정을 위한 제안. 「대한가정학회지」 36(4), 35-48.
- 박언주(1996).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홍립(1991). 「경제학원론」. 서울: 박영사.
- 박홍식(1981). 「공공정책론」. 서울: 대영사.
- 송혜림(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서구 산업사회 와 한국에 있어서 사회정치적 관점들.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16차 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이기영(1990).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가사 노동의 가치와 그 평가. 「생활과학연구」. 서울 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5, 16-19.
- 유영주(1994). 가정의 사회화·사회의 가정화. 한국 일보 1994.1.1.
- 이영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1993). 「성평등의

- 사회학]. 서울 : 한울.
- 통계청 a.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_____ b. 「도시가계연보」. 1997
- 달립, D.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1989.
- 브라우, F. D. & 퍼버, M. A.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문숙재 · 김순미 · 정순희(공역). 서울: 학지사. 1994.
- 헤르네스, H. M. 여성과 복지국가: 사적의존에서 공적의존으로의 변화.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역). 1989.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 Beutler, I. F. & Owen, A. J. (1980).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16-26.
- Ferree, M. M.(1983). Housework : Rethinking the Costs and Benefits. *Families, Politics, and Public policy*. New York & London: Longman, 148-167.
- Modlich, R.(1993). Cuba : Struggle for development is a challenge for women. *Women & Environments*(April).
- Reid, M. (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Rosaldo, M. & Lamphere, L.(1974). *Woma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 Thompson, P. J.(1988). *Home Economics and Feminism*. Home Economics Publishing Collective UPEI.
- Zimmerman, S. I.(1988). *Understanding Family Policy ; Theoretical Approach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